

과수화상병 전북까지 남하...나주배·장성사과 '비상'

'과일나무 구제역' 익산 사과농장 첫 확진...전북도 예찰·방제 상황실 가동 발생편 폐농 선고...나주시, 2100농가에 예방약제 9800포 공급 방제 주력

'과일나무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전북에서 처음 발생했다. 과수화상병이 익산까지 남하하면서 인접한 전주·군산·김제뿐만 아니라 배·사과 산지인 나주와 장성·곡성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2일 전북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31일 전북에서 처음으로 익산의 사과농장 1곳(3.6ha)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진됐다.

전북농업기술원은 다른 시·군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익산시 발생과원에 긴급 방제를 명령하고, 각 시·군에는 3일부터 19일까지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정기예찰을 앞당겨 실시하도록 했다.

익산시에는 과원의 출입을 제한하고 인접한 전주, 군산, 김제, 완주를 발생 우려 시·군으로 지정하는 등 권역별 대응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2일 전북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관계

자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시·군 간 유기적인 방역 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그동안 전북지역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근지역인 충남과 충북에서 발생면적이 확대되면서 결국 전북까지 남하했다.

전북과 인접한 사과 산지인 장성과 곡성, 우리나라 배주산지인 나주도 비상이다.

앞서 나주시는 화상병 예방을 위해 전체 배 재배 2100농가(1946ha)에 예방약제 9800포를 긴급 공급했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2015년 처음 발생했고, 지난해 10개 시·군 188농가 131.5ha로 확대돼 과수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한그루의 나무에서 발생해도 '반경 100m이내'의 과일나무는 뿌리째 뽑아서 태워 묻어야 해 사실상 과수농가에는 폐농 선고나 다름없다.

? 과수화상병
병해충에 의해 과수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해 마르는 병이다. 주로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한다. 과수의 꽃이 피는 시기에 벌·나비 등 곤충과 비바람을 타고 주로 전염된다.

이 때문에 농가의 주기적인 예찰과 적기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1일 현재 전국적으로 87농가 48.7ha가 확진됐으며 전국의 과수화상병 발생 범위가 점차 확산하는 추세다.

이에 병해충 발생상황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황조정했다.

전북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치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라며 "확산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의심증상을 발견했을 때에는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과수화상병으로 의심되는 잎과 과실.

“고창군민 공론화 결실”...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합의

1년 갈등 아산면 주민 최종 동의 쓰레기 감량화·재활용 조례 제정

고창군과 지역주민들이 아산면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1년 넘게 갈등을 빚었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마무리됐다. 전국 군단위 지자체 최초의 공론화 모범 사례로 기록됐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과 아산면소각장설치반대책위원회는 전날 군청 회의실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론화 협의회 최종 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고창군과 대책위가 서명한 공론화 합의 주요 내용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호 간 노력 ▲소각시설은 내구연한 15년간 운영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비 보완과 환경성 조사 실시(환경과 건강을 염려하는 주민의견 반영) ▲배출가스 TMS(원격감시 시스템) 데이터 실시간 공개 ▲쓰레기 감량 정책 등 주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만들기 여건 조성 등이다.

이번 최종 합의는 다수의 아산면민 반대로 논란을 겪던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고창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공론화협의회는 지난 1일 고창군청 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공론화협의회 최종합의 결과를 설명하고 합의서를 전달했다. <고창군 제공>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냈다. 이는 속의(공론화)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고창군은 이번 합의를 통해 쓰레기 감량 정책 등 주민이 참여하는 여건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생활폐기물 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자원순환정책실천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자원순환 실천마을 확대 등을 통한 관리 정책을 수립해

주민 의견을 사업에 반영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소각시설의 엄격한 품질 관리와 시공을 통해서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책임있게 직영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주민 갈등으로 인해 반복과 질타가 이어진 것을 하루빨리 치유하고 주민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순창군, 감염병 예방 강화...자치법규 제정 추진

순창군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달 29일부터 20일 간 군보에 조

례안을 게재해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감염병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예방 활동과 함께 생활 속 방역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이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정하게 됐

다. 현재 전북지역은 2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순창군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역사회 내 집단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자가 격리자 관리 및 유증상자 진단검사를 하고 고위험 시설 방역 소독·방역물품 지원을 추진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kwangju.co.kr

“인재 양성에 써달라”...고창 김복순씨 1억원 기부

칠순의 고창 할머니가 “지역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장학금으로 1억원을 쾌척했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읍에 사는 김복순(70·사진) 할머니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1억원을 고창군장학재단에 기부했다.

김 할머니는 함평에서 태어나 17세 무렵 가족과 함께 고창으로 이사와 생활했다.

이후 남편의 직장을 따라 서울로 갔다가 10여년 전 노후를 고향에서 보내기 위해 고창으로 내려왔다.

김 할머니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웃과 나누고 베풀고 싶은 마음을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인재 양성을



위해 귀하게 써달라”고 당부했다.

유기상 고창군장학재단 이사장은 “사람 키우기에 뜻을 함께 하고 힘을 보태 줘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역 인재들이 폭넓은 분야에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장학재단은 1998년 설립돼 서울과 전주에 장학숙을 운영하고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군산밤 푸드존’ 내일 운영 재개
군산시는 대표 관광지인 시간여행마을의 ‘군산밤 푸드존’ 운영을 4일부터 재개한다. 푸드존은 목~일요일 오후 시간에만 연다. 군산시는 개장을 앞두고 이 곳에 길이 36m의 빛 터널 등 다양한 야간 경관 조형물을 설치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